

민주, '공수처 설치 법안 최우선 처리' 협상 착수

검경수사권 조정 시간 갖고 협의 한국당 반대편 '2개안' 내용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지정한 뒤, 검찰개혁 법안의 두 가지 골자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가운데 공수처 설치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뒤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이 공수처 설치를 최우선에 두고, 집중해서(협상을) 진행하자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11월 말에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있지만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협의가 필요하기에 최우선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시간을 좀 더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이 의원의 특권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민심을 살펴



검찰 개혁, 국민의 명령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의원도 기소 대상에 넣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공수처법 분리 우선 처리' 등의 방침을 야 4당에 알리고 이점을 쫓아가며,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힘쓰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반영하듯,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두 개의 공수처법,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월요일 11시에 3당 원내대표 정례회의가 있고 수요일에 '3+3' 회의가 있다"며 "한국당과 논의를 진행하며 의중을 살피고 그쪽에서 공수처 관련 동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을 포함해 제2의 '4당 공조'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민주당의 계획대로 여야 4당 공조를 통한 공수처법 우선 처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 설치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자당 권은희 의원을 강하게 밀고 나갈 전망이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야 4당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안보다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

공개시 사실상 컷오프 반발 등 내홍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위 20% 명단'이 알려질 경우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 효과를 내면서 물감이의 발판이 될 수 있으나 당이 공천 내용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규정에 따라 현재 현역 의원 12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미 임기 중반 평가는 완료됐으며 다음 달 5일부터는 최종평가에 들어간다. 의원 간다면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지는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된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에 대해서 '경선을

통한 공천'을 원칙으로 정한 가운데 중간·최종평가를 합산해 하위 20%(128명 중 25명)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시 '20% 감산' 패널티를 적용받는다. 과거에는 이 같은 평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천 심사에 적용해 왔다.

당내에서는 '하위 20% 명단 공개' 방침은 명단에 오른 의원들의 '불출마' 결단을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명단 공개 시 지역구 표심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위 20% 명단 공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 의견도 적지 않다. 극단적으로 탈당 등을 선택하며 거세게 반발할 경우 당 전체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에 따른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전반적인 총선 전망과 야당의 인적 쇄신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단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의회 민주 소속의원 이재명 선처 탄원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전체 23명)은 20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1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의 경기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1350만 경기도민과 뜻을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판부에 간곡히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며 "도정의 불안정으로 그 피해가 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는 청년 기본소득, 공공의료 시설의 CCTV, 닥터헬기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몰두했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교법부는 지난달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513조 '예산 전쟁'

예결위 28일부터 심사돌입 다음달 29일 의결 합의

국회는 오는 22일 정부로부터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한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이고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중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균형 재정'만을 고집하다가 경기 침체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소재 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선 관련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4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

을 베풀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예산안 곳곳에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배치했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달 말까지 이어질 여야 예산전쟁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697억원으로,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 증가했고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원)도 올해보다 10.3% 늘어나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민주, 이번주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금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이 일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박 의원이 제출할 법안은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다.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인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평가 브리핑

천정배 의원 "기후 위기 막을 모든 수단 정부에 요구"

대안정치연대 소속 천정배(광주 서구 을) 의원은 지난 16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린 '제141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1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기후위기를 막도록 한국 정부를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기후관련 재해에 대한 의회의 역할' 회의에 참석한 천 의원은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에서 지구적 기후 위기 막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국회는 정부의 국제적인 약속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어 "지난해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로 10년간 배출량을 빠르게 증가시켜왔으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는 의장 참석국 67개국과 일반 참석국 84개국 등 총 152개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는 의장 참석국 67개국과 일반 참석국 84개국 등 총 152개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